

OECD 가입과 『삶의 질』



조 남 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경 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가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우리 정부와 OECD간에 가입 협정이 정식 서명되었고 국회의 비준 절차만 거치면 우리나라는 29번째 OECD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OECD는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호칭되고 있으며, 우리의 OECD 가입을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증거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는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결코 선진국

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OECD 가입이 곧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OECD 가입의 의미는 우리의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을 하루속히 선진화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래 급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숙명적으로 맞이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OECD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 발전도, 그리고 소득 수준뿐 아니라 『삶의 질』도 세계화 되고 일류화되어야 한다.

지난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의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 선언과 더불어 그간 침체되었던 사회복지에 대

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복지증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OECD 가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은 어떠한가. 최근 OECD 사무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8개국(헝가리 제외)을 대상으로 39개 경제사회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총저축률, 근로시간, 실업률 등 총 6개 경제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반면 평균수명(71세)은 24위, 건강관련 비용지출은 19위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의하면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우리나라가 OECD 29개 국가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더불어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은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복지 수요의 증대는 물론이고 그 내용도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확대 및 성숙화에 따라 복지재정의 수요는 급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선진국에 접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연간 정부재정 중 약 45%를 국방과 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복지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여 있다. 즉,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있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다같이 분담할 수 있는 국민적 화합과 의식 개혁이 우선적으로 선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상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진화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한 의식과 행동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물

우리의 선진화 목표가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한 의식과 행동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준도 경제성장 수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성장 및 안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형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 특히 OECD 국가 중 100여 년에 걸친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를 지닌 선진국과 불과 30년 내외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를 단순 비교하여 하루아침에 복지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무리

질적인 풍요 하나만으로는 결코 삶의 질이나 선진화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고, 선진국 시민은 시련과 도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자기 혁신과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지공동체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